신항락 칼럼

국민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이사·주필

방귀세, 비만세…. 고개가 갸웃해지지만 실제로 내고 있는 세금이다.

'방귀세'는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부과하는 소위 환경세. 가축들이 내뿜는 방귀나 트림이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데서 매겨지는 세금이다. '비만세'는 뚱뚱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아니다. 대신, 비만을 유도하는 탄산음료나 인스턴트식품에 매기는 특별세.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에서 부과 내지 추진 중이라고 한다.

세금을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수지만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면 내는 쪽에선 악으로 여기게 된다. '가세맹어호'(苛稅猛於虎)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릴 법도 하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뜻이다.

지금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국민 건강을 고려한 결정이자 지방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4조2000억 원의 증세가 눈에 보이는데도 아니라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궤변일 뿐이다.

이를 현 정부가 굳이 고집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꼼수'라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고,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담뱃값 500원 인상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생활이 어렵고, 흡연층이 저소득층에 밀집한 상황에서 소득 역진(逆進)정책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담뱃값 인상은 꼼수 논리

물론 합리적인 선에서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줄이고, 열악한 지방세수 충당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겠다면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이 많건 적건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인두세라는 점이다. 이는 역진성 즉 '뒤로 가는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승용차를 굴리고 하루 20개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 올해 세금으로 101만 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176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가진 자에게는 '푼돈'이지만 서민에게는 '큰돈'이다. '서민 호주머니 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세금이 현실화될 경우 상대적 피해는 인구 대비 서민이 많고,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광주·전남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36%로 추락하면서 전국 8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이고, 전남은 13.8%로 전국 시·도 중 밑바닥이다.

여기에 광주시의 금년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3조6179억 원 중 34.1%인 1조2341억 원, 전남은 5조8031억 원의 34%인 1조9172억 원에 달한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은 정부의 또 다른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세금 4조2000억 원 중 일부를 지자체에 넘겨 반발을 무마하자는 의도이지만 복지예산이 광주·전남만 3조2000억 원에 이를진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지방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먼저 80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요 예산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국가가 맡는 게 상식이다. 단계적이나마 기초연금과 지방소비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지방의 요구대로 올려야 한다.

지난 2006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 역시 21%로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부세는 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정해야 한다. 일률적인 지원은 100m 달리기 선상에서 30m 앞선 주자와 시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니라면 광주·전남의 낙후는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 그 해법은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 인상에서 찾아야 한다. 복지 재원 확보와 소득 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방귀세를 걷든지

우리는 지금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다 되지만 책임을 지고 용퇴한 고위층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진상규명을 약속한 대통령의 눈물도 말라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리본을 달지 못하게 한 게 교육부다. 집권세력에게 책임이 큰 세월호 이슈가 새정치연합을 위기로 몰아넣은 현실도 가히 역설적이다.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사학법 개정을 놓고 53일간 정기국회를 보이콧했으면서도 작금에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까지 거론했으니 이 역시 아이러니다. 대선 당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약속도,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요원하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담배는 끊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감동의 정치를 하라.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방귀세, 비만세를 걷든지.

社 說

정부 영아·어린이 교육비 지원 외면해서야

국가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일선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결정해 놓고도 지원은 뒷전이어서 시·도 교육청 재정운용이 파탄지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교육청은 2015년도 관련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채 일선 교육청에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광주의 경우 내년 1943억 원, 전남은 2192억 원을 자체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현실은 난감하다.

정부와 자치단체에 재정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으로서는 버겁기 그지없다.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이들 사업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자세다. 만일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덜 걷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 책무인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에 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크게 의식했을 정부가 정작 실행에 옮길 예산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인기 영합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도 교육청은 대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해법이 나와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가 관건인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하게 교육재정 교부법을 고쳐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약속을 잘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광주 자치구의회 의정비 인상 자제하라

광주 각 자치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광주지역 기초의회에 따르면 5개 구의회 의장단은 최근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3%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동구와 북구의회는 13% 인상안을 집행부에 제출했으며, 남구와 광산구의회도 내부적으로 13%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공무원 보수 대비 인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평균 3%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치다. 4년치를 합산할 경우 타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인상안은 통상 물가상승률에 따라 한자릿수 인상률에 그친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높다. 거기에는 의원들이 배를 채우겠다는 '꼼수'가 깔려있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선거가 시행된 해에만 의정비를 확정할 수 있고, 다음 선거까지는 바꿀 수 없도록 개정되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 받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주민들의 공감 속에 이뤄져야 한다. 현재 광주 5개 구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로 전국 자치구와 비교해 가장 낮다. 동구와 남구는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서구와 북구, 광산구 등도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다.

여기에다 주민들은 이전투구를 일삼고, 해외여행과 인사 청탁 등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의원들에게 넌더리가 난 터다. 더구나 서구의회는 최근 3년간 무려 21%를 증액했으며 남구와 북구의회도 각각 12.5%, 10.9%를 인상해 비난을 샀다.

그럼에도 꼼수를 통해 또다시 의정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의회는 13% 인상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부득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여론을 전제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은펜칼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송 민 석
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전남협의회장

로마 천 년을 지탱해준 철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프랑스어로 노블레스(nobless)는 고귀한 신분, 귀족이라는 뜻이며 오블리주(oblige)는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솔선수범'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초기 로마 시대 왕과 원로원 귀족들은 지도층으로서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평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전쟁이 나면 먼저 앞장섰다. 이처럼 솔선수범과 절제 있는 행동은 로마 제국을 떠받드는 굳건한 초석이 되었다. 이런 전통이 자연스레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리더십의 표본이자 사회지도층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신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사회지도층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부와 권력, 명예만큼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서양에서 출발했지만 과거 우리에게도 없었던 게 아니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양반 사대부나 사림 계층들은 일신을 돌보지 않고 의병을 조직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바로 솔선수범을 한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었다.

"장수 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다." 영화 '명량'의 한 대사다. 이순신 장군은 300여 척이 넘는 왜군의 공격에도 불과 12척의 배로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에 나아가 싸워 위기에 빠진 백성과 나라를 구해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희생정신이야말로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신념이자 지켜야 할 철학이다. 희생이 없는 리더십이란 공허할 뿐이다.

시대에 따라 요구하는 리더십이 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 그리고 국민을 위하지 않는 리더십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말로만 이순신의 리더십을 호들갑스럽게 떠들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부터 진정 국민을 위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이면에는 상류층의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사회지도층과 그 자손들의 병역 면제율, 사회지도층의 투기와 탈세, 부의 대물림을 위한 2세 편법승계,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는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국회 청문회를 지켜보면 사회지도층이라 자칭하는 인사들이 각종 부도덕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고위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을 볼 때마다 서글픈 생각이 든다.

선진국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우리에게 부럽게 느껴지는 것도 우리 사회 지도층의 책임 불감증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지도층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다.

정부각료집단이 다른 사회집단보다 군면제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 시대의 지도자란 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주다 보니 이순신과 같은 올곧고 신뢰가 두터운 영웅이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날에도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할 윤리와 도덕의 가치는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스스로 깨끗한 도덕성과 사회적 봉사를 솔선수범하고 실천해 나갈 때 불신을 해소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철학과 도덕성을 갖춘 상류층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안정된 사회이고 사회의 갈등도 줄어들고 품격도 높아지게 된다. 워런 버핏은 '열정은 성공의 열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라 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발휘될 때 사회는 좀 더 환해질 것이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無 等 鼓

김씨와 금씨

지난 추석 인터넷에선 우리나라 본관별 성씨가 얼마나 되는지가 화제였다. 2000년 기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본관별 성씨는 333개다. 김(金), 이(李), 박(朴), 최(崔), 정(鄭), 강(姜), 조(趙), 윤(尹), 장(張), 임(林) 등 10대 성씨가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김씨가 2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김씨는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한자는 '쇠 금'인데 읽기는 '김'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고려 말 이성계는 백성을 선동하기 위해 그림이나 글자를 사용한 예언, 도참(圖讖)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이때 나온 유언비어가 '목자득국(木子得國)'이다. 목(木)과 자(子)를 합하면 이(李)가 되는데, 바로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이성계가 나라를 얻자 또 다른 유언비어가 등장한다. '나무(木)의 성질을 가진 이씨가 쇠(金)의 성질을 가진 금씨에게 진다'는 거다. 음양오행(陰陽五行)에 따르면 나무(木)는 쇠(金)를 이길 수 없으니 결국 '이씨가 금씨에게 나라를 빼앗긴다'는 이야기가 된다.

금씨의 연원은 신라 제4대 탈해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주 계림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금궤 안에서 사내아이가 발견됐는데, 그 아이가 유명한 '알지'다. 금궤에서 나왔다 하여 성은 '금'이라 했다. 연원이 오래된 만큼 금씨의 숫자도 많아져서 조선시대 가장 많은 성씨가 금씨였다.

불안해진 이성계는 금씨의 기운을 죽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다. '앞으로 쇠금 자를 성으로 할 때는, 쓰기는 쇠금 자로 하되 발음은 김씨로 한다'는 것이다. 이후 금씨는 김씨로 불려야 했으니, 정작 금씨들로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력이 자신과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는 요즘 우리 정치권을 지켜보면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마저 갖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기 고

112 허위신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김 성 훈
목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112 신고전화는 국민이 위험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누르는 긴급전화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급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출동이 늦어져 국민,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 신고는 총 9887건으로, 이로 인해 소중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이런 허위신고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 퇴실 당한 유모(45)씨는 앙심을 품고 112에 신고를 했다.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 허위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방화를 하러 간다" 는 협박 전화까지 하는 바람에 서울 중부경찰서 약수지구대 경찰관 6명은 하루에 3차례나 헛걸음을 해야 했다. 유씨는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처분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조모(54세)경위 등 경찰관 6명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며 국가에 대해서는 유류비 1480원, 출동한 경찰관 6명에게는 각각 25만~ 0만원의 위자료 등 모두 1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의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바쁜 일과 중임에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어 심한 허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월 19일 경북영천경찰서에서는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총 14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구류 3일을 선고 하는 등 법원의 판결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실무상 예를 들어보면 만취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순찰차를 타고 가기 위해 길을 잃어 버렸다거나, 혼자 넘어졌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에 치었다고 거짓으로 뺑소니 신고를 하는 경우,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차량을 도난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신고로 인해 긴급 출동해야 할 사건의 출동이 늦어지는 등 경찰 인력낭비는 물론 국가예산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신고는 그동안 가벼운 경범죄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제2호 (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112 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911, 영국의 999 등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허위 신고는 외국에서도 예외 없이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3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최대 2600만원의 벌금을,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정도의 벌금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라도 허위신고자에게는 정학처분과 제적까지 권고한다고 한다.

국가에서 112허위신고를 이처럼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경찰에서는 위급상황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완벽한 112 신고사건 처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요구조자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 1초라도 더 빨리 출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법 행위인 112신고 전화를 이용한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단순 민원의 경우 182 전화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